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채윤정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사범교육학부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s Local University Policy

-Focusing on RISE and Glocal University 30 Policy Promotion-

Yoon Jung Chae

Dept. of Education for Teachers, Dongguk University-WISE

요약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에 비해 지방대학은 큰 감소를 보이는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대학의 약화는 지역 소멸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을 내놓았다. RISE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글로컬대학 30은 대학 경쟁력 향상과 지방대학 육성을 목표로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 지역혁신 주체 간의 협업과 지원체계 구축, 학문 분야의 균형 발전,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방대학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체 유치와 지역인프라 개발, 소외된 학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Abstract Compared to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universities are showing a large decrease and facing a crisis. These problems are related not only to education but also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appearance of the region. Therefore, a policy that nurtures local universities is necessary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posed a policy called the 'Glocal University 30' with RISE. RISE establishes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support universities and link them with regional development, while 'Glocal University 30' aims to improve university competitiveness and foster local universities, simultaneously pursuing region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rough these policies, local universities can receive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s expected to help develop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Additionally,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promote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by fostering universities with world-class competitiveness in regional specialized fields. However, to achieve this, tasks such a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uitable for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establishing collaboration and support systems among regional innovation actors, balanced development of academic fields, and preparing stable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universities remain.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local university policies, expansion of autonomy in sustainable university financial management, the attraction of businesses to preven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development of local infrastructure, and active support for neglected academic fields. Through this,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ocal university policies will be possible.

Keywords : RISE, Glocal Universities, Regional Development, Nurturing Local Universities, Finan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Yoon Jung Chae(Dongguk University-WISE)

email: eunice28371@dongguk.ac.kr

Received June 29, 2023

Revised August 1,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1. 서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현안 중에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는 것이 지방대학 운영의 어려움이다. 이는 2011년과 2021년의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 대학은 0.3%만 감소했지만 지방대학은 6.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1].

지방대학의 존폐 문제는 비단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문화 인프라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과도 직결된다[2-6]. 오랜 기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지역 불균형 현상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역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7,8].

예컨대 부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제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이 취약하여 제조업 청년고용이 전국대비 악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청년인구의 유출과 더불어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의 양적·질적 불일치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청년 취업률을 악화시키는 복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를 50%를 넘어섰으며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1차적으로 대학 진학단계에서 유출되고 나서 구직단계에서 2차적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0,11].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산업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산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된 인재가 지역산업계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상적인 지역 발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체나 교육기관을 비롯한 인적·물적 자원과 고유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달성된다[3,12]. 따라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지역대학의 특성화, 지역 우수 인재 유치지원,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지방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등의 중점과제를 발표했다[12].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수행된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2].

그러나 과거 정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산업기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저조한 취업률은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3].

2022년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연계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와 글로벌대학 30이다.

정부는 이 두 정책의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전면적 체질개선, 통합적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해파, 지역과 대학의 상생 등을 강조하면서 RISE와 글로벌대학 30을 통해 지역 난제 해결,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 혁신과 발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정부들의 지방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RISE와 글로벌대학 30의 추진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지방대 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정책의 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행효과와 분석,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작용 분석 등 다양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2.1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는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이하 누리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의 교원확보와 신입생 충원, 학생 취업률 제고 면

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역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되지 못한 문제, 산학협력에서 실질적 협력의 미흡, 중복 재정지원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발전을 연계시키는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들이 지역대학에 포함됨에 따라 오히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여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8].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더불어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면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대학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13].

문제인 정부의 경우 지역혁신체계에 주목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대학 혁신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제안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대학 혁신과 더불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 모델이 등장하였으나 기존 사업평가의 방향성과 관행을 따르는 상황에서 혁신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

2.2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시행된 지방대학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혁신과 발전을 통한 지역난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RISE와 글로벌대학 30 등 새로운 지방대학 정책을 제시하였다.

2.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RISE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RISE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

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RISE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우선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운영(2023~2024)하여 이들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RISE를 도입할 계획이다.

RISE는 대학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차원에서 지역 수요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산학협력,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등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2조원 이상)를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지자체의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의 주도로 각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각 시·도에 대학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기관(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대학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 7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2024년 기반조성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의 RISE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7개 지역이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① RISE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할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②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전담할 기관으로 RISE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③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계획(2025~2029)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7월까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추진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컨설팅 및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지역별 RISE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14].

2.2.2 글로벌대학 30

우리나라의 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지방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특히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RISE 이외에 글로벌대학 30 정책을 발표했다[15]. 이 정책은 국가와 지역, 대학 경쟁력의 동반 상승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허물기와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 대학-지역의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 모델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대학 30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에서 상향식 혁신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 소수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 기반 지원 방식에서 대학 단위의 전략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별로 예산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칸막이형 예산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대학이 혁신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토대로 대학혁신 추진전략을 지원 전략 혁신과 대학 구조 및 운영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역별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대학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교육부는 글로벌대학 1개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범부처-지자체-산업계가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부처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투자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계의 우수인력을 글로벌대학 교원으로 파견하여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산학협력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협력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글로벌대학 30의 대학 내부 구조와 운영의 혁신은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의 안팎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 운영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과와 학과, 대학과 대학 또는 대학과 산업체에 공동 소

속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JA(Joint Appointment)교원제도, 교원승진 및 인센티브 재설계, 무학과 제도, 융합전공, 자기주도설계 전공, 복수전공 활성화 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글로벌대학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5년 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글로벌대학 30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대학지원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15].

교육부는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위해 6월 1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혁신기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신청 가능한 대학인 166곳 중 65.1%인 108곳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16]. 이들 중 통합 추진모델, 지역 특화 산업, 교육혁신, 연구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 및 고도화 지원 등을 강조한 15곳이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층평가를 거쳐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글로벌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17].

3.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3.1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전망

과거부터 정부는 꾸준히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에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대 정책으로 교육부 주도의 고등교육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의 지역혁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는 RISE와 국가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의 동반 상승을 목표로 대학 혁신의 모델로 글로벌대학을 추진하여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현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기대는 다음과 같다.

우선 RISE의 시행으로 지역 대학은 지역 특성에 부합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대학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관내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자체, 대학,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반을 다져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대학 30 또한 지역의 산업과 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 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ISE는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대학은 더 나아가 대학의 연구 및 교육능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이 두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가지는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강화로 대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에서 양성된 지역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지역산업체와 기관에서 활약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두 정책의 연계는 지역 발전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RISE와 글로벌대학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었고[2,8,12]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차원의 관내 대학 지원 육성,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의 재설정 등이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2,3,11-13]. 따라서 과거에 추진되었던 비슷한 정책들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과제로 우선 지방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3,12]. 획일적인 지원과 평가기준은 대학들을 무한경쟁 속에 몰아넣어 지역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교육자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8,12]. 따라서 RISE와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역혁신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대학별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지표,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 등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특성에 따라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재량권 확대도 고려할 만하다[3]. 이처럼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의 지방대학들이 고유한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지자체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체계와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11,18]. 이러한 협업체계는 대학 입장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학 내 전문가들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여 관내 대학들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기업의 재직자 교육관리, 지방대학-지역산업체 간 연계 교육에 대한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체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11,18].

셋째, 평가와는 별개로 기초학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획일적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거나 유행을 좇아 학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경우 대학마다 비슷한 학과들이 신설되고 교육과정 시스템 또한 동형화되는 등 대학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 [3,4]. 이는 결국 기초학문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면 평가와 별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자나 대학교수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함으로써 학문생태계가 균형적으로 유지되어 대학이 기형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국가 경제규

모와 OECD 평균기준에 근거했을 때 열악한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학재정지원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19].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9].

4. 결론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과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방대학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12]. 그러나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산업체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과 지역 소멸의 위기감은 더욱 가속화되었다[3-6].

현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지방대학 정책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RISE와 글로벌대학 30 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지역과 지방대학의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 RISE의 시행은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은 지역 대학의 인프라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의 협력은 지역 경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대학 30도 지역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력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대학 정책을 대해 지자체의 역량부족, 수도권으로의 인재와 산업체 쏠림현상, 특정 학문분야에 지나친 집중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도 남아있다. 이에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먼저 재정지원에 있어서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방대학이 인재를 양성한다고 해도 그에 걸맞는 산업체와 지역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지방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주체 간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대학과 지역산업체를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화 산업체의 발굴 및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소외된 학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학문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의 산업계에서 활동하여 지역 공동체가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이루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유연한 구조로 구축되어 서로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이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자체와 대학, 지역산업계가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이해하고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을 추구하여 지방대학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newsfreeze, "Local universities are disappearing. The current location of the crisis" February. 20. 2023. <https://www.newsfree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045>
- [2] K. H. Moon, "Gyeongsangnamdo's Regional Innovation and Political Dynamism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Vol. 17, No. 1, pp.63-101, June 2021. DOI: <https://doi.org/10.34164/iniede.2021.17.1.003>
- [3] K. Y. Byun, S. Y. Lee, S. Y. Byoun, K. O. Song, K. W. Suh, "Improving the Current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5, No. 3, pp. 79-108, 2017.
- [4] S. Y. Lee, "Analysis and Overcoming Measures of Crisis in Local Universities through Social Big Data Analysis", *Kor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25, No. 2, pp.215-252, June 2021. DOI: <https://doi.org/10.18397/kcgr.2021.25.2.215>
- [5] W. J. Jang,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rone education in colleges according to the RISE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39, No.1, pp. 129-144, 2023. DOI: <https://doi.org/10.22988/ksc.2023.39.1.010>
- [6] H. E. Jang, J. H. Le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With Special

- Reference to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ol.24 No.1, 2018.
DOI: <https://doi.org/10.26863/JKARG.2018.02.24.1.99>
- [7] J. W. Sun, “Development of talent in endangered local universities- how to exp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 Vol. 71, No. 21-3, pp.289-323, September 2021.
DOI: <http://dx.doi.org/10.21333/lglj.2021.21.3.009>
- [8] J. H. Kim, “A Study on How to Nurture Local Univers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Comparing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Carried Out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7 No.1 pp.105-135 Spring 2013.
<http://www.riss.kr/link?id=A100055160>
- [9] S. Y. Lee, “Analysi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Distributed Youth Employment”, *BDI Economic Trend Brief*, Vol. 24, pp.1-16, 2022.
- [10] 2020 Domestic Population Movement Statistics, 2021, Statistics Korea.
- [11] S. Y. Lee, Local University Crisis Response and Win-win Cooperation Plan, p.8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p.65-75 2021.
- [12] K. J. Lee, S. H. Kwon, B. H. Ahn, S. Y. Kim,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Enterprises: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6, No. 2, pp. 53-84, May 2020.
DOI: <https://doi.org/10.26857/JLLS.2020.5.16.2.53>
- [13] J. H. Kim, “Tasks and Limitations in the Local University Nurturing Policies Drawn from Central Gov.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Comparison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outh Eastern Area-”,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25 No. 4, pp.219-247, 2013.
<http://www.riss.kr/link?id=A99883406>
- [14] Ministry of Education News, “2025 Full-fledged start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innovation-centered university support system (RISE)”, March 9, 20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1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3&s=moe&m=020402&opType=N>
- [15] Ministry of Education News, “First mover, bold innovation toward K-Universit’Glocal University 30」 promotion plan” April 12, 20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73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8&s=moe&m=020402&opType=N>
- [16] Hankyoreh Newspaper, “108 challenges to the selection of 30 ‘Glocal Universities’… Local university sense of crisis”, June, 1, 20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9419>
- [5.html](#)
- [17] Ministry of Education News,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preliminary designation as a glocal university that will break down the walls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and lead university reform”, 202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37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 [18] K. J. Lee et. al., A Study on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and Universities to Overcome Educational Inequality and Create Jobs, p.30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9, pp.241-261.
<https://m.riss.kr/link?id=M15801901>
- [19] S. J. Ban, “The Policy Suggestions for Higher Education Financial Expansion to overcome the Structural Crisis in Higher Education System”,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32, No. 1, pp.31-58, 2023
DOI: <http://dx.doi.org/10.21333/lglj.2021.21.3.009>

채 윤 정(Yoon Jung Chae)

[정회원]



- 2017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21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22년 8월 ~ 2023년 2월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육역량개발센터 연구초빙교수
- 2023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사범교육학부 교수

<관심분야>

대학혁신, 고등교육정책, 산학협력